

---

# 출장보고서

---

2026. 06. 03

KDI 경제전망실

## 1 출장 목적

- OECD EPC(경제정책위원회) 회의 참석
  - OECD EPC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상황 및 경제구조개혁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,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논의
  - 논의된 결과는 OECD Economic Outlook 등으로 발간될 예정임.

## 2 출장 개요

- 출장지 및 기간
  - 출장지: 프랑스 파리 OECD
  - 출장기간: 2026년 5월 17일(일) ~ 23일(토)
- 출장자 (총 2명)

소속	성명	직위
KDI 경제전망실	유재영	모형총괄

## 3 출장 일정

일자	주요일정(안)
5.17(일)	[이동] 인천 → 파리
5.18(월)	OECD 백승진 박사 간담회
5.19(화)	사전 준비회의 (재정부 대표단에서 조율)
5.20(수)~5.21(목)	OECD EPC 회의 참석
5.22(금)	wrap-up 회의 (재정부 대표단에서 조율)
5.22(금)~5.23(토)	[이동] 파리 → 인천

## 4 주요 활동 내용

### Global Economic Outlook and Risk

#### □ 안건 주요 내용

- 2026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·산업생산 호조로 비교적 견조하였으나, 중동 분쟁이라는 대규모 공급충격이 회복세를 시험하고 있음.
- OECD는 분쟁의 지속기간·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전망을 제시함.

#### □ 주요 발표 내용

##### [세계 경제 평가]

-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송 차질과 에너지·핵심 인프라 손상
  - 원유 공급 약 10%, 글로벌 가스 공급 약 15% 감소하였으며, 비료·헬륨·황·석유화학 원료 등 핵심 산업투입재로 충격이 광범위하게 확산
  - 높은 원자재 가격·생산자비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기 시작하였으며, 일일 온라인 소매가격지수는 2022년의 흐름과 유사하게 상승
  - 분쟁 발생 이후 국채금리(10년물 8bp 이상)가 상승하였고, 특히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반영
  - 주식시장은 유럽을 제외하면 비교적 견조하나, 상승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AI 관련 기업에 집중
- 성장 전망 시나리오
  - (기준선) 2025년 하반기 호조의 이월효과를 반영 시 2026년 세계 성장률은 약 3.2%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을 것으로 평가
  - (완만한 충격) 에너지 가격이 시장 기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, 세계 GDP 성장률은 2025년 3.4% → 2026년 2.8% → 2027년 3.1%로 둔화 후 소폭 회복

- (장기 충격, 모형 기반) 에너지·비료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공급 부족·금융여건 긴축이 동반되는 경우, 세계 GDP는 2026년 2.1%, 2027년 1.8%로 크게 둔화하며 다수 신흥국이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

[전망 리스크 및 정책대응]

○ 리스크

- 금융시장의 무질서한 리스크 재평가, 에너지·식량가격에 취약한 신흥국 등이 하방 위협이며, AI 투자 확대 지속은 상방 요인

○ 통화 정책 대응 방향

-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지속과 성장 둔화 간 어려운 상충에 직면(특히 이 중책무 보유국).
-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하였으나 장기 기대는 대체로 안정

○ 에너지 지원조치

- OECD가 추적한 초기 지원조치는 대부분 비(非)타겟형(유류세·가격 상한, 보조금)으로, 분쟁 장기화 시 지속 불가능. 가능한 한 신속히 타겟형·한시적 조치로 전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

[지역별 동향 및 국가별 코멘트]

○ 인도

- 성장 0.5%p 하향·물가 0.5%p 상향으로 다수가 경기 정체·물가압력 확대를 우려.
- 통화 제약·재정 소진·구조개혁 정체의 어려운 국면

○ 핀란드

- 탈화석연료 정책으로 전력 95%·에너지 80%가 비화석이어서 충격이 작음. 가격신호를 유지하고 저소득층만 기존 사회보장으로 지원

○ 그리스

- 2022년과 달리 공급측 충격으로 재정·통화 여력 모두 제한적. 그리스 조치는 타겟형·한시적

○ 일본

- Q1 2026 연율 2.1% 성장. 화석연료 한시 가격안정·전략비축 방출·비중동 수입 확대. BOJ는 기초물가가 2%에 근접해 점진적 금리 인상 지속
- 캐나다
  - 순에너지 수출국이라 교역조건상 이득이나 투자 반응 불확실.
  - 물가 2%→3%로 상승, USMCA 재검토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
- 오스트리아
  - 완만한 충격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실제로는 완만~장기 충격 사이. ECB 금리 인상 가정 여부를 질의
- 영국
  - 1분기 성장 G7 최고. 2022년 대비 가스 수요 14% 감소로 노출이 작아 '이번엔 다름'. 타겟형·한시적 대응과 재정준칙 준수
- 이탈리아
  - 가스가격 안정이 인플레이 상한을 형성. 선물가격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 보지 않음. 점진적·예산중립적 타겟 조치
- 남아공
  - 연료세 한시 인하. 3% 물가목표 도입 후 첫 공급충격으로 기대 고정인 핵심 시험대
- 미국
  - 경제 회복력·기술투자 견조. 유가 \$10 상승 시 물가 +0.18%p·성장 -0.07%p의 경협칙. 강한 생산성이 희망 요인
- 스웨덴
  - 2022년만큼 물가가 오르진 않겠으나 전쟁 장기화 시 위험 증대. 에너지가격 자동조정 계약조항 확산으로 인플레이가 지속될 소지
- TUAC 분석
  - 2021년 대비 성장 모멘텀이 약하고 초과저축이 상위 10%에 집중. 지원의 기준선 설정이 관건이며 황재세 논의 부재를 지적

○ EU 집행위

- 유가+불확실성 충격 결합으로 소비자대면 부문 신뢰 급락·예비적 저축 상승. 임금-물가 채널은 아직 완만, 6월 회의에서 시나리오 기반 재평가
- 2022년에비해 물가 상승폭이 더 큼(글로벌·광범위 품목). 선물가격 신뢰성 저하로 시나리오 의존, 재정여력은 더 좁음

## Fiscal Policy

### □ 안건 주요 내용

- GFC·코로나에 이어 에너지 충격까지 더해지며 국가 재정여력이 소진 되는 가운데,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 상승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압박이 가중
- 성공·실패한 재정·연금·의료 개혁 사례를 통해 무엇이 정치적으로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지를 논의

### □ 주요 발표 내용

- (OECD 경제국) 장기 재정갭(long-term fiscal gap) 분석
  - 현재 부채비율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조정 규모를 측정한 결과, 정책 변화가 없다면 중위 OECD 국가의 재정압박은 향후 약 4.9%p 확대되며, 9개국은 8%p를 초과. 연금·보건·요양 지출이 주요 동인
  - 향후 10년 내 약 3%p의 압박이 현실화되며, 부채/GDP는 중위국 기준 2045년까지 약 46%p 상승할 것으로 추정
  - 1970년대~코로나 이전 25개국 34개 부채감축 사례 분석 결과, 조정은 주로 지출 측면에서 이루어졌고, 추세 이상의 성장이 핵심 동인
- (아르헨티나) 강력한 재정조정 프로그램 경험
  - 수십 년간의 만성적 재정적자가 통화·금융 불안으로 전이된 가운데, 위기 상황이 강력한 재정조정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특수성을 강조
  - 준재정적자(중앙은행 불태화 비용 GDP 대비 약 10%) 포함 시 재정불균형 규모가 더욱 컸으며, 보조금·경제서비스·자본지출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삭감 단행

- 인프라 투자는 민관협력(PPP) 등 민간 재원으로 전환하였고, 사회부조(아동 중심 식료품 바우처 등)는 실질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
- (한국, KDI 유재영 발제) 재정의 구조적 도전과제와 개혁노력
  - 한국은 OECD 최고 속도의 고령화(65세 이상 인구 '20년 16% → '50년 40% 초과)와 최저 합계출산율('24년 0.72)로 연금·건강보험·요양에 동시 압력발생
  -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부재로 위기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나 부채 증가 가속
  - '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(보험료율 9→13%, 소득대체율 43%)에도 '62년경 고갈 전망으로 추가 개혁 필요
  - 여성·고령층 노동참여 제고 시도하나 인구 역풍 상쇄에는 한계

#### □ 주요 논의

- (핀란드) 출산율의 핵심 동인은 보조금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(교육·일자리·주거)이므로, 성장·고용·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
- (네덜란드) 수급연령을 기대수명 증가의 2/3만 연동, 확정기여형 전환, 의료 개혁으로 연 GDP 약 1% 절감(지출 증가폭 축소)
- (그리스) 2009년 전망과 달리 연금비용이 오히려 GDP 대비 2%p 감소. 탈세 대응 구조개혁으로 5% 내외의 기초재정흑자 달성
- (캐나다) 운영지출 억제와 타겟 투자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. 충분한 사전 예고와 형평성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며, 이민은 주거·인프라 수용능력과 보조를 맞춰야
- (남아공) 고령화보다 청년실업·인구배당 미활용이 과제. 재정 지속가능성 자체가 성장의 토대이며, 재정·통화·네트워크산업 개혁·국가역량·지출구성 전환의 결합이 필요

## Shifts in labour markets

#### □ 안건 주요 내용

- AI 등 기술변화,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, 성별 격차,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

## □ 주요 발표 내용

- (Barbara Petrongolo, University of Oxford) AI의 노동시장 영향
  - AI는 일부 과업을 대체하고 다른 과업은 보강하며, 그 효과는 직무·부문별로 상이. 도입 속도는 전례 없이 빠름.
  - 생산성 향상이 자동적으로 광범위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, 이익이 자본·노동 및 집단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관건
  - 정책 3대 과제: ①AI 활용 우선순위를 가치·사회적 선택에 근거해 설정, ②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쟁 확보, ③ 재훈련·전직 지원·보상 등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
- (Stefano Scarpetta(OECD)) 생산가능인구 변화
  - 생산가능인구(20~64세)는 OECD 평균 약 8% 감소하나 일부 국가는 30~35% 감소.
  - 남녀 고용격차 해소 시 GDP/인 감소의 절반을 만회 가능하며, AI의 생산성 기여가 더해지면 고령화 영향을 상쇄할 여지. 다만 측면별 디지털 숙련투자가 관건

## □ 주요 논의

- (일본) 여성(15~64세 67→77%)·고령(65~69세 43→56%) 참여 확대로 노동력 증가. 가족지원·아동가정청(2023), 65세까지 고용의무·70세까지 권장. 직무 미스매치 확대로 유연성·재교육 강화 필요
- (미국) 노동시장 회복력 유지하나 고용증가가 보건·사회서비스에 집중. 핵심연령 참여율 84%로 역대 최고 수준. AI는 대체보다 보강으로 보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상승을 조기경보로 주시
- (핀란드) 노동공급 확대 개혁은 성공했으나 수요 부진으로 실업률 10% 상회 → 개혁 수용성·신뢰 훼손 우려. 효과 설명·소통에 신중해야함.
- (튀르키예)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력 유지. 원격·하이브리드 근무가 포용·생산성에 기여. AI 고노출·저보완 일자리 약 21% 추정 → AI 리터러시·디지털 역량 우선개발이 필요

- (캐나다) 실업률 약 2%p 상승. 해고보다 '채용 둔화'가 주원인이며 청년·신규진입자에 집중되어 구조적 손상 우려
- (한국, 재정부 임근형 심의관 발언) 고용률 사상 최고·상용직 비중 상승 등 양호하나 청년층 어려움 지속. AI발 대체 단정은 시기상조이며, 여성 경제활동은 증가
- (독일) 약한 성장으로 고용 정점·실업 상승, 실제 노동력 감소(이민·참여로 상쇄 안 됨). AI 지출의 상당부분이 투자가 아닌 운영비임에 유의. 네덜란드는 시간제가 많아도 총노동공급은 상위권이며 AI 채택은 아직 실험적

## Energy prices, energy security and competitiveness

### □ 안건 주요 내용

-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이 가격·산업경쟁력·재정·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투자 방향을 점검

### □ 주요 발표 내용

- (IEA 수석에너지경제학자) 에너지 수급상황
  - 위기 진입 전에는 재고가 충분하였으나 현재 기록적 속도로 재고를 소진 중. 운송연료 수요의 계절적 증가, 영농철 진입(경유·비료)으로 추가 압박
  - 정상화 경로는 단순하지 않으며, 신뢰 회복에 시간이 소요. 소진된 재고 재축적만으로도 향후 3년간 약 100만 배럴/일의 추가 수요 발생
- (IEA 수석에너지경제학자) 산업 영향과 가격 전가
  - 석유화학 원료(LPG·에탄·나프타)가 가장 큰 타격(올해 수요 하향의 절반 수준). LPG는 개도국 취사연료이기도 함. 항공유가 그 다음이며, 경유 수요 둔화는 산업활동 위축의 신호
  - 도매가의 소매 전가는 OECD, 특히 미국에서 직접적(미국 휘발유 약 +40%, 독일 약 15~20%). 가격통제가 많은 신흥국은 재정 부담으로 전가
  - 의장 코멘트: 각국의 에너지 원산지 다변화가 필요

## □ 주요 논의

- (독일) 2022 위기가 에너지집약 산업에 영구적 손실(생산 약 1/5↓). 이번엔 유가 중심이고 가스·전기 상승은 작아 충격이 덜함. 가격상한 없이 '연료가격조정법'·경쟁법 개정 등 구조적 조치와 한시 유류세 14센트 인하(담배세로 충당)
- (이스라엘) AI·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핵심 이슈. 국가안보·민감데이터는 자국 내, 그 외는 해외 활용 가능. 네덜란드(입지)·아일랜드(자체 재생 조달)·싱가포르(경쟁입찰) 사례. OECD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설계 역할 제안
- (태국) 태국의 석유·가스의 약 47%가 중동산. 나프타·비료 의존(90%·70%) 다변화, 오일펀드 보조 축소·타겟 지원, 2030 넷제로 가속
- (네덜란드)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력 유지. 원격·하이브리드 근무가 포용·생산성에 기여. AI 고노출·저보완 일자리 약 21% 추정 → AI 리터러시·디지털 역량 우선개발이 필요
- (콜롬비아) 공순석유수출국이나 정제유·비료·가스 수입으로 비용 전이. 안정화기금 유지하되 양방향 조정, 일반보조→타겟보조, 전력보조를 저소득층 태양광 투자로 전환
- (영국) 재생 확대로 전력-가스 디커플링 가속, 제조업 전기료 약 25% 경감(1만개사). AI 성장지대로 그리드 용량 재배분
- (스웨덴) 기업들이 생산 본국 근접화(탈중국)·복수공급·재고 확대·에너지가격 자동조정 계약으로 취약성 완화

## Transshipment, trade diversion

### □ 안건 주요 내용

-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절화 속에서 환적·무역전환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, 관세 우회·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점검

## □ 주요 발표 내용

- (Lars Jensen) 통상여건 동향과 경제적 균형 전망
  - 교역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(아시아→유럽 두 자릿수, 서아프리카·중남미 성장). 최대 우려는 인플레이션 상승 시 수요 둔화 가능성
  - 무역 흐름은 '물처럼' 경로를 찾으며, 결국 소비 규모가 교역 규모를 결정하는 경제적 균형을 찾을 것으로 판단함.
  - 부품 중심의 역내(intra-Asia) 교역 증가는 관세 우회·환적 가능성과 연관. 아시아-유럽 교역의 왕복 컨테이너 비율이 과거 2:1에서 1:4로 변화하며 무역수지 구조가 이동. 니어쇼어링은 진행되나 시장 규모·인프라가 제약
- (A.P. Moller-Maersk) 최근 통상여건에 대한 논의 사항
  - 생산성·구조변화·거시리스크가 공통 주제로 논의됨. 비경쟁(non-compete) 조항은 민간 근로자의 1/5~1/3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 이동성·지식 확산을 저해
  - AI가 표준적 구조변화인지 새로운 정책접근이 필요한 근본적 변화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으며, 경상수지 불균형·기후의 거시영향(CASM 프레임워크 등) 분석이 후속 과제로 제시

## □ 주요 논의

- (OECD 사무국) 2025년 미국 관세 변화로 중국 수입은 급감하고 동적 아시아(동남아+대만) 수입이 증가 → 일부 무역전환 시사. 다만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외에는 뚜렷하지 않음
- (EU 집행위) 무역전환·환적 리스크를 준실시간(290개 품목 대시보드)으로 모니터링하고 무역방어수단(세이프가드·반덤핑) 준비. 대(對)러 제재 우회 대응으로 키르기스스탄 수출 급증에 제재
- (헝가리) 자동차 부문이 관세 영향을 받았으나 AI 관련 기계 수출 급증으로 상쇄. 공급망 다변화가 중동부유럽(CEE)에 기회이며 최근 FDI에서 중국 비중 확대
- (멕시코) 컴퓨팅·전기장비 교역은 증가하나 국내 생산으로는 약하게 반영. 체계전환의 증거는 없으며 대미 수출에서 부가가치·자본재가 증가

- (미국) 무역은 모형이 예상하는 결과대로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 물류가 중요. 불법 관세회피·AI 교역의 물류 영향 등을 게스트에게 질의
- (오스트리아) FDI는 무역과 양(+)의 상관 - 갈등 시 교역뿐 아니라 FDI도 같은 방향으로 위축(대중 감소, 대아시아·중남미 증가)
- (캐나다) 역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기업들이 미국 경유 비(非)미국 수입(중국 전자제품 등) 경로를 관세 회피 위해 우회 변경
- (스페인) 1차 무역전쟁(2018~19) 분석상 대EU 무역전환·가격효과는 완만(중국의 대미 수출 1달러 중 9센트가 EU로). 최근 물량 증가는 관세보다 과잉생산 등 구조적 요인
- (이탈리아) 무역전환 증거는 크지 않으나 대미 FDI 유입 증가. 중국→유럽 그린필드 투자(배터리·태양광 등)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
- (튀르키예)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분의 약 3배가 타 시장으로. 비용효율뿐 아니라 회복력·지정학 리스크가 중요해지며 '연결자 경제'의 중요성 부각

## Investment screening and economic security

### □ 안전 주요 내용

- 투자안보는 경제안보의 한 축으로, 투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를 의미. OECD 보고서 「Economic Security in a Changing World」를 기반으로 논의

### □ 주요 발표 내용

- (Antonio Gomez) 국외 투자와 경제 안보에 대한 흐름
  -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나, 지난 10년간 지정학·지경학·기술 변화로 각국이 투자 관련 안보 리스크를 재평가
  - 투자안보 정책 변화는 2012년경 가속화되어 2020년 한 해에만 40건 이상의 조정이 집계되었으며, 2026~27년에도 높은 활동 수준이 지속될 전망. 주요 동인은 지정학적 긴장, 핵심기술·인프라 보호, 민감정보 우려

- 현재 OECD 5개국 중 4개국이 투자심사 제도를 보유하여 제도 미보유가 오히려 예외가 됨. 대상 부문도 방위·부동산에서 에너지·핵심인프라·핵심신용기술(2016년경부터)로 확대
- 2009년 OECD 가이드라인(비차별·투명성·예측가능성·비례성·책임성)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,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는 1세대 제도는 감소하고 2세대 제도가 확산
- (Laura Alfaro)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
  - 다국적기업은 자본·기술·경영역량의 '묶음'으로서 생산성 파급, 기술 확산, 시장 접근을 제공하며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음(미국 BEA 자료상 더 높은 생산성·임금)
  - 다국적기업은 세계 GDP·교역·R&D를 주도(상위 200대 기업 R&D가 스위스 GDP에 필적). 지식은 명문화·암묵·조직적 형태로 기업에 내재
  - 이러한 지식 이전이 전략적 경쟁·안보 우려라는 지경학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며 투자심사·수출통제 강화로 연결. '정책수단보다 목표가 많은' 구조적 난점을 지적

#### □ 주요 논의

- (캐나다) 개방 기조를 유지하되 공급망 회복력·국가지시형 투자 우려에 대응하고 있음. 1985년 Investment Canada Act, 2009년 국가안보심사 도입. 최근 경제안보 고려와 민감기술(AI·데이터)을 추가하고 사전 의무신고를 강화한 사안별 접근
- (코스타리카) FDI 중심 발전모델(자유무역지대 regime가 FDI의 74%·GDP 15%). 의료기기 등 고부가 유치, 무기·채굴·탄화수소는 regime 배제, 수익소유자 등록 등 투명성 제도. OECD 표준의 역할을 강조
- (영국) G7 최고 수준의 FDI 스톡. 2022년 국가안보·투자법(NSIA) 운용 - 작년 1,000건 이상 신고 중 17건만 개입(16건 조건부 승인)으로 비례적. 올해 4년차 검토 발표 예정
- (호주) 각국 심사 제도의 평균 심사기간과 거부율(rejection rate)을 질의. (의장: 거부율만이 적정 지표는 아니며, 제도 존재 자체로 사전 억

제 효과가 있음을 부연)